

도 넘은 박 대통령 띄우기 보도

박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 - 종편의 도 넘은 찬양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2월 25일, 채널A <직언직설>은 사회자가 제시한 '박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온갖 '찬양'을 쏟아냈다.



△2.25 채널A의 <직언직설> - 박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 찬양

**“부드러운 분위기도 있고 깊이도 담겨”
“국민과 소통하려 하고 따뜻한 이미지”**

<직언직설>의 사회자가 “레이저 눈빛이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라고 제시하자 출연진들은 “레이저 눈빛이지만 따뜻하게도 보이는데 강온작전을 같이 쓰는 걸로 저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곽영일), “사람을 쏘아보는 보는데 일반 사람들처럼 정말 미워서 쏘아보는 그런 건 아니고, 부드러운 분위기도 있고 깊이도 담겨있게 쳐다보니까 사람이 뭔가 찢리는 것”(이석우). “(부채춤 춘절 언급하면서)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 국민한테 이런 걸 보여 주고, 대통령이지만 나도 이런 걸 출 수 있는 따뜻한 이미지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님은 그래도 국민과 소통하려 하고 따뜻한 이미지”(강명도)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 TV조선 <김광진의 신통방통>도 사회자가 “오늘 박 대통령 담화문을 들으면서, ‘와 저렇게 새로운 용어를 익히느라고 고생을 하셨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박 대통령을 띄우는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재를 뿌리고 김을 빼는 전략”이라고 비하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KBS, 박 대통령 담화에 ‘찬양’을 넘어 ‘헌정뉴스’



△2014.2.25 KBS [데스크분석] '제2의 취임사' 의미는?

박 대통령 띄우기는 25일 KBS의 국정담화문 보도에서 꽃을 피웠다. 당일 KBS는 톱보도부터 8꼭지(약 14분)를 구성해 박 대통령 담화문을 보도했다.

KBS는 이춘호 정치경제부장의 [데스크 분석]에서 노골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뉴스를 헌정했다. 제목부터 <‘제2의 취임사’ 의미는?>로 뽑은 [데스크 분석]은 “박 대통령은 오늘, 정치권이 이전 투구중인 각종 현안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최우선 과제인 경제와 통일 분야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어 이 부장은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라야만 실천과 성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라며 국민과 여야 모두의 협력을 강요했다. 이쯤 되면 박 대통령 띄우기를 넘어 ‘헌정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BS 여론조사, ‘긍정평가’만 언급...다른 조사는?

박 대통령 1주년을 맞이해 방송3사는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했다. 24일 KBS는 <국정지지도 63.1%...‘통일은 대박’ 공감>, <“대북 관계, 공기업 개혁 기대 반영”> 두 꼭지를 할애해 보도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만을 부각했다.

그러나 다른 방송사의 경우 부정적 평가가 예측되는 인사논란, 공약후퇴, 대선개입 의혹 등을 국민들에게 묻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KBS의 깨알 같은 박 대통령 띄우기의 노력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조사누락인지 ‘중박방송’ KBS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지방선거 D-100일, KBS 선거보도 '0전'

박 대통령에 대한 띄우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 100일 앞둔 2월 24일, MBC 1꼭지, SBS 2꼭지, YTN 2꼭지를 구성해 선거보도를 했다. 그러나 KBS는 지방선거 100일 전임에도 단 한건의 기사를 신지 않았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올바른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적 관심 유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사로서의 책무를 외면했다.

<조선>, '깨알 리더십'에 대한 '깨알 찬양'?

박 대통령에 대한 찬양에 있어 조선일보도 다른 언론사에서 뒤처지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6일 <취임식 때와 비슷한 녹두색 옷...초심 잃지 않겠다>에서 지난 취임식 사진과 담화문 발표 사진을 비교했다. 기사는 박 대통령이 입었던 옷 색깔이 비슷하다면서 이를 '초심 잃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꿈보다 해몽' 격인 셈이다.

<채널A가 시청자만족도 8분기 연속 1등?>

편향방송의 대표주자 채널A가 공정하다고?

채널A 시청자만족도 8분기 연속 종편 1위

작년 지상파인 MBC보다 높아
다양·신뢰·유익·공익성 부문 1위



채널A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종합편성방송채널 가운데 시청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채널로 조사됐다. 이로써 채널A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2년 1분기(1~3월)부터 2014.2.27 동아일보 1면

2TV와 SBS에 이어 만족도가 높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K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I는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청자가 직접 방송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평가해 산출한다. 채널A는 10점 만점에 7.15점을 얻어 4개 채널 중 시청자 만족도 1위에 올랐다. 이 지상파 채널인 MBC(7.07)보다 높은 점수다. (동아일보 2014.2.27)

지난 26일,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이 2013년 '방송프로그램 시청자만족도 평가지수(K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종편 4개 채널 가운데 채널A가 다양성·공익성·신뢰성·유익성·공정성 등 7개 영역에서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동아일보는 1-2면에 걸쳐 <채널A 시청자만족도 8분기 연속 종편 1위>, <모든 연령대 "채널A 1위"...세대 아우르는 방송 자리매김> 등 KISDI의 평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KISDI의 평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민간 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종편 채널 평가에서 TV조선과 채널A가 하위권을 차지한 것과도 대비되기 때문이다. KISDI 평가는 지상파와 종편에 대해 똑같은 평가기준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왜곡된 평가 결과를 낸 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평가에는 특정프로그램의 구조적·내용적 문제에 대한 진단 없이 '시청자들의 평가'만을 앞세웠기 때문에 최근 논란을 빚은 5·18 역사왜곡 등 저질·막발 방송 부분이 빠져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KISDI 평가는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 정치 관련 패널 30명 중 야당 성향 단 6명에 불과

과연 채널A가 공익성과 신뢰성, 공정성 등을 담보하고 있을까?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채널A의 대표적인 시사프로그램인 <이연경의 직언직설>과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에는 총 46명의

패널이 출연했다. 이 가운데 국내 정치 관련 분야 등을 다룬 패널은 30명이다. 스포츠, 연예관련 내용을 다루거나, 북한 실상·외교 분야 등을 다룬 패널(16명)을 제외했다.

총 국내 정치 관련 분야 등을 다룬 30명의 패널 중 야당 성향의

성향	이연경의 직언직설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친정부·야당	친야당	기타	친정부·야당	친야당	기타
합계	14	2	7	10	4	9

△<채널A>의 대표적인 시사프로그램의 패널 출연 분석

정치인과 평론가는 단 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4명의 출연진은 여당성향의 정치인이나 친정부·여당 평론가, 정부관계자로 구성됐다.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다분히 편향적인 패널 구성이다.

■ 자막으로 야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

24일 <직언직설>에 출연한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야권연대 논의에 대해 "서로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치집단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선거라는 구체적인 전투 현장에서 서로가 필요해서 같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공동의 강령이 나올 수도 있고 정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자막으로는 김 의원이 사용하지도 않은 ["야권연대 안 하는 건 자살 행위"]라고 나오며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자극적인 단어를 배치했다.

25일 <쾌도난마>에 출연한 김형준 씨는 안철수 의원을 언급하며 "(김상곤 교육감에게) 마치 구걸해가지고 오는 이런 거는 새정치와 맞지 않는다...(중략)..새정치에 대한 피곤함만이 아니라 새정치에 대한 식상함까지도 있다"며 안 의원을 깎아내렸다. 이에 채널A는 ["구걸하는 안철수, 새정치에 맞지 않다"]라는 자막을 내보내며,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했다.

‘개악’에서 ‘위헌론’까지… 조중동, 방송법 개정안에 집중 포화

“민간방송 편성위 구성까지 강제… 위헌 소지”

새누리 ‘개악 방송법’ 원점 재검토

여야가 공영방송인 KBS 이외에 종량제 폐지 등 민간방송사에도 편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이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새누리당은 27일 미방위 정책회의를 앞두고 “민간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이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했다.

방송법 개정안 관련 쟁점

민간방송도 편성위원회 구성

- 민간방송사의 편성자율권 및 언론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 있어

사측과 종사자 측 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

- 노조가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에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는 길 열려

- 미국 등 해외 어느 주요국도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는 법률 없어

보도·제작 분야 등 간부 임명에 있어 직선제

임명동의제 추진제 중 선택 운영

△2014.2.28 동아일보 6면

조중동이 편성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을 위한 적 법률로 몰아세우며 여론을 호도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송법 개정안은 개악법에서 위헌적 법안으로 색칠됐고,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을 다른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 법안으로 전락시켰다.

지난 2월 26일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측과 종사자측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과 편성규약 제정 등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그러자 다음날 조중동은 지면을 통해 독소조항, 방송법 개악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반발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방송법 개악 주역은…여는 한선교 조해진, 야는 이상민 유승희>(2.27 6면)라는 기사를 통해 의원들을 압박했다. 또한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을 내세우며 “아무리 협상이 중요해도 헌법적 가치와 같은 원칙은 버리면 안되는데, 법안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한 것 같다”라는 발언을 실어 ‘위헌 프레임’을 제기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방송발전 막는 독소조항’이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자율성 침해’라며 우려했다.

종편을 권 조중동, 자사 지면을 통해 방송법 취지까지 뒤흔들어

28일 조중동은 기사와 사설로 한껏 수위를 높여 ‘위헌’임을 기정사실화했다. 동아일보는 <“민간방송 편성위 구성까지 강제… 위헌 소지”>(2.28 6면)라고 말하며 새누리당이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했고, 중앙일보는 <“방송법 개정안 위헌”>(2.28 5면)이라며 새누리당이 뒤흔게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이들 신문사들은 편성위 구성은 민간방송사의 편성자율권을 침해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에 어긋나는 ‘위헌’임을 부각시켰다.

이들은 신문사를 운영하듯 똑같이 민영 방송사도 운영돼야 한다는 논리와 일반 사적 기업임을 강조하며 신문법과 방송법 사이를 오고 갔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방송 의무 준수가 간과됐고,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 향상을 도모 등을 명시한 방송법조차 외면했다.

종편을 권 조중동이 자사 지면을 통해 방송법의 취지까지 뒤흔들어 놓은 것이다.

‘도다리’에 밀린 ‘국민파업대회’ 방송-‘외면’, 신문-‘익명동원 시민불편’ 강조



△2.25 KBS(위), MBC(아래)

MBC·YTN 보도누락
KBS·SBS 단신보도

2월 25일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파업대회가 열렸다. 그러나 방송4사는 현 정부 아래 최대 인파가 모인 국민파업대회를 거의 외면하다시피 했다. KBS와 SBS는 보도 말미에 국민파업대회를 단신으로 처리했고, MBC와 YTN은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차지한 보도는 ‘미세먼지’, ‘도다리 썩국’ 등과 같은 리포트였다. 특히 KBS와 MBC 두 공영방송사들이 뉴스가치가 떨어지는 내용은 입 맞춰 보도하면서 정작 10만이 참여한 국민파업대회는 언급조차 하지 않거나 30초도 되지 않는 단신으로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 1년 실정을 비판하고 나선 국민들의 목소리가 ‘도다리 썩국’, ‘미세먼지’에 밀린셈이다.

조선·동아가 등장시킨 ‘익명시민’은 누구? 불법, 혼잡, 교통마비 등 부정적 이미지 강조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6일 <그들만의 시위… 시민들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또 도로점거 불법시위… 퇴근길 시민 발 묶여>를 통해 불법, 불편, 혼잡, 차도 점거, 교통마비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해 왜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지에 대한 이유는 전하지 않았다.

이들은 익명의 시민들도 대거 등장시켰다. 조선일보는 기사에 인용된 5명의 시민 중 1명만이 실명이 나왔고, 동아일보는 익명의 1명의 시민이 등장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았다는 것 말고는 시위를 벌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가게 안이 웅웅 울릴 정도여서 손님들이 자리를 떠장사를 못했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한다면서 정권 퇴진까지 요구하는 건 공감할 수 없다” “매번 벌어지는 시위대의 불법 차로 점거를 경찰이 왜 못 막느냐” 등의 말을 쏟아냈다.

심지어 익명 속 시민의 발언은 사실 속에서도 등장했다. <행진 허용한 판사들은 불법 시위 현장에 나와보라>(동아일보 2.27)에서는 [도심 불법 시위로 불편을 겪은 시민의 입에서는 “판사들이 광화문에 한번 나와 실태를 보고 판단하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